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자율관리육성사업 시작부터 사후관리 까지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3월 20일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



2월 15일 열린 연합회 이사회 모습.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2월 15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연합회 회의실에서 김호연 연합회장을 비롯, 각 지역 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정산보고 및 금년도 총회 안건을 비롯한 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연합회는 오는 3월 20일 금년도 총회를 개최해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7. 1. 4)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시행(기재부, 2016. 8. 1),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2017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지침 등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 참여할 때에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해당부지가 사업대상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자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지자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육성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해당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5.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요청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친 후 이월하여 사용 가능
6.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은 부기등기(附記登記) 해야 하며,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할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받아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

8.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세외수입이므로 보조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는 당초 목적한 용도 외로 사용변경해서는 안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양도·교환·임대·폐기해서는 안됩니다.
* 제한기간 : 기계·장비류는 5년, 부동산·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은 10년

알림

수산전문분야 컨설팅 희망 공동체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수산업협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공동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입니다.

- 신청기간 : 4월 말
- 신청대상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 신청방법 : 컨설팅 희망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www.jayul.go.kr)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한국수산업협회 자율관리팀에 이메일(kimsk0277@naver.com)로 송부
- 신청분야

분야	주요 컨설팅 내용
자원	자원생태, 불법어업 예방지도, 자원조성 등
기술	양식기술, 마을어장 관리
안전	어선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경영	재무, 브랜드·포장지, 상표개발, 특허출원 등

※ 문 의 : 한국수산업협회 자율관리팀(02-589-4604)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2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자율관리어업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에서 장모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1일 대전 레전드호텔 회의실에서 지자체, 한국수산업협회, 수협,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자율관리어업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추진방향(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평가시스템 입력 교육 및 자율관리어업 컨설팅 운영계획(한국수산업협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3.0

“내가 지켜줄게, 우리 바다야”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넓은 바다라도 막 쓰면 안 돼요.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청소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첫걸음입니다.

넓은 바다라서 혼자선 안 돼요.
해양수산부가 확산운동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넓은 바다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 모두가 바다를 아끼면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꿈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 어장환경개선, 불법어업 방지를 실천하는데 자율관리어업이 있습니다.

www.jayul.go.kr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협회 및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수산회, 금년도 자율관리 지원사업 계획

공동체 현장방문형 교육·우수공동체 선정대회 등 추진

한국수산회는 올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추진 등 현장교육 강화와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해외우수사례 답사 △공동체 평가업무 지원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체 현장방문형 교육

공동체 현장방문형 교육은 기존에 한국수산회 지역컨설턴트, 수협, 지자체 등에서 각각 실시해 오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합해 운영기로 했다. 기본컨설팅은 '16년 평가결과 500점 미만 공동체를 비롯, 참여공동체와 신규공동체 등 총 800여개 공동체에 대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로 이동해야 하는 섬 지역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교육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관리분야 등 전문컨설팅은 종전처럼 컨설팅 요청이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은 올해부터 수산회와 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합동으로 권역별 1회씩 총 10~12회를 계획하고 있다.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추진한 각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공동체를 선발,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를 개최한다. 평가



한국수산회는 올해 자율관리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컨설팅 등 현장방문형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는 △어선 △양식·복합 △마을 △내수면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공동체 구성원 노력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어업유형별로 공동체 1개소씩 선정해 각각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계획은 선정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평가절차는 지자체에서 추천된 공동체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선정대회 행사당일)를 통해 이뤄지며, 오는 11월경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대회에는 공동체 어업인을 비롯, 해수부, 지자체, 관련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공동체 평가업무 지원 등

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들에게 외국의 자원관리 및 경영 우수사례 등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세차례(4, 6, 9월경)에 걸쳐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인원은 1회당 15명 정도로, 1차 연수는 신규공동체, 2차와 3차는 우수공동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업인의 연수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회는 공동체 등급 결정 및 등급별 순위결정, 우수공동체 선정 및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체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6~7월 경 공동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평가담당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10월경 워크숍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수산회는 자율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어업인간 또는 지역 간업종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총괄협의회는 3월 12월 연 2회 개최하며, 분쟁과제 해결을 위한 조사활동은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관리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

2016년 내수면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2월 28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개최

한국수산회는 오는 2월 28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자율관리어업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내수면평가협의체 회의는 정부방침에 따라 '15년부터 내수면공동체에 대한 평가 중 기존 수협평가를 내수면평가협의체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면공동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평가한 공동체 활동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협의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전산평가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내수면평가는 △자율관리어업 추진정도 △대외활동 및 주변과급 효과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결속력 등 각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가 없는 공동체는 활동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평가항목별 최하점수를 받게 된다.

내수면평가협의체는 해양수산부와 수산단체, 대학교수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 수산시장 '피쉬세일'이 있습니다.
www.fishsale.co.kr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이기만 신임 통영시연합회 회장 2월 14일 통영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모습.

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는 지난 2월 14일 통영 해피데이웨딩홀에서 제5회 회장 이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권 이임회장, 이기만 신임회장을 비롯,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김동진 통영시장을 비롯 150여명의 관내 어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는 지난 2001년 2개 공동체 75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2017년 현재 68개 공동체 2,834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거대 지역공동체로 성장했다.

전국 연안도시 중 가장 많은 공동체

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연합회는 현재까지 114회에 걸쳐 총 116억원의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통영시연합회장에 취임한 이기만 회장(통영시 산양면 중화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은 취임인사말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을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 등 바다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힘을 합쳐 우리의 문전옥답인 바다를 가꾸고 보호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법률' 대표발의

바른정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 및 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으로만 규정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해 수산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경기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 확대

경기도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난해 1,446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정책소개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토론 △공동체 지도자 리더십 강화교육 △공동체 수준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자율관리공동체 결성을 원하는 어업

인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와 규약,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구소는 자율관리어업 제도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2월 22일 화성시 경기남부수협에서 도내 38개 공동체 대표와 어업인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공동체 탐방 / 거제 새우조망 자율관리공동체

조업중 침적 폐어구 철거 수거 ... 어장환경 개선에 모범



서경수 거제 새우조망공동체 위원장.



침적 폐어구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거제시는 지난 2015년 말 관내 20여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록빛 바다 1연안 가꾸기'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지역 연안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거제시 새우조망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서경수)도 참여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연말 거제시 종무식에서 표창을 받았다.

거제지역에서 새우조망업에 종사하는 25명의 어업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어족자

원 보호를 위해 자체규약을 정해 조업기간을 월 20일로 단축하고, 1일 조업량도 자율관리 참여전 무제한적으로 잡던 것을 1일 150kg으로 한정해 자원관리를 꾀했다.

이와 함께 조업중 발생하는 침적 폐어구를 수거, 거제수협이 폐어구 수매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 1회 폐자재, 폐부자 등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여 거제시 어업진흥과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여타 어업단체들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침적 폐어구 수매사업으로 얻

은 수익금 중 절반은 수거해 온 회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방류사업 등 자체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종묘 방류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공동체에서는 정부자금에 공동체 자담분을 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폐어구 판매 적립금을 활용, 지난해의 경우 참돔 치어 1만3000마리를 지세포 연안에 방류했다. 올해도 5~6월경 자체 자금으로 치어방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새우조망의 고질적인 병폐

였던 조업구역 이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명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어업을 일체 근절시켰다. 이 모두는 매월 열리는 공동체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 모두가 자율관리 어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경수 위원장은 밝혔다.

서 위원장은 2006년 공동체 참여 이후 수년간 공동체를 이끌었으나 이후 활동이 미진해 아쉬웠다며 2014년부터 다시 위원장을 맡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만큼 거제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선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유형별 맞춤형 수산자원관리방안' 발표

연근해 자원수준·어획량 고려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배합사료 의무화·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추진

수산자원의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형별 맞춤형 수산자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전년 대비 12.7% 가량 감소했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전갱이 어획량이 50% 가량 감소, 어획량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참조기 42%, 멸치 33.4%가 감소했다. 또 꽃게(24%), 오징어(21.8%), 갈치(21.5%)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수준과 어획량을 고려해 주요 어종을 기후변화형, 지속가능형, 고갈형, 남획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수산자원관리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수산자원량과 생



해수부는 연근해 자원수준과 어획량을 고려해 주요 어종에 대한 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량이 모두 많은 지속가능형 어종과 자원량 증가에도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획이 부진한 기후변화형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형 어종은 해양관측 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어획정보를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변화 등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는 어획예측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남획형으로 분류되는 고등어, 갈치 등은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자원관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등어는 현재 자원량이 중간 수준이지만 중국의 호망어선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로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한중일 3국 정부의 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회유성 어종의 3국 공동자원관리를 제안·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꽃게, 참조기 등 수산자원이 고갈

되고 있는 어종은 어린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통제, 어획량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형별 맞춤형 자원관리 대책과 함께 양어용 배합사료 의무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세목망을 사용하는 업종을 18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이는 동시에 어업인은 산란어미의 포획을 자제하고 위판장은 위판을 자제, 소비자들은 산란어미를 먹지 않도록 하는 '전국민 물고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어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어기 시행업종에 대해 어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양식기술이 가장 앞선 광어·품목부터 우선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선 100여척 “남해 바다모래 채취 반대” 해상 시위



지난 2월 15일 아침 부산남항에서 대형선망어선 100여척이 바다모래 채취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대형선망수협 등 어업·수산업 단체들은 2월 15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앞에서 어선 100여 척을 동원해 ‘남해 EEZ 모래 채취 반대’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대형기선저인망, 근해통발, 멸치권현망수협, 전국해상산업노조, 전국트롤선원노조, 부산항발전협의회 같은 전국 어업·수산업 관련 30여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2008년부터 남해, 서해 EEZ에서 모래 채취를 허가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모래 준설이 불가능해지자 2008년부터 남해,

서해 EEZ 두 곳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두 EEZ에서 채취된 모래는 총 1억 495만m³로 20톤 덤프트럭 312만 대 분량이다. 이는 국내 건설용 모래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남해는 어민의 반발로 지난 1월 15일부터 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됐지만 서해 EEZ(군산 서남쪽 90km 거리)에선 아직도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이후 4차례 연장해 온 남해, 서해 EEZ 모래 채취를 2020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어민의 반발로 보류한 상태다.

이에 앞서 남해EEZ바다모래채취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연송)는 2월 8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자원 씨 말리는 바다모래채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바다모래 채취 영구적 중단하라”

부산에서 수산인 대거 참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월 22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5층에서 열렸다. 김영춘, 최인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부산·경남지역 어업인과 수산인, 일반인 등 무려 1,000여명이 참석, 바다모래 채취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어선거래 아무나 못한다... 어선중개업 제도 신설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선을 거래할 때도 공개거래시스템 하에서 이뤄져야 하고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어선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 구축을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수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금융 관련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토록 했다.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 수출 전략품종 ‘해삼’ 자원 조성 시동

전남도, 해삼 서식장 대폭 확대해 우량종자 방류

전라남도가 중국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 자원량 확대를 위해 올해 25억 원을 들여 ‘해삼자원 조성사업’에 본격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해삼 서식장 200개소를 만들어 우량종자 6,0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해삼자원 조성사업은 낮엔 바위에 숨어 있다가 밤에 돌아다니는 해삼의 습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주기 위한 것이다. 유속 영향이 적고 먹이가 풍부한 해역에 돌, 어초 등을 투입해 해삼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는 방식

이다. 올해 첫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서해 냉수대가 위치해 천해의 해삼 양식 조건을 갖춘 진도, 신안을 비롯한 6개 시군이다. 상반기 중 어촌계 어업인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역별 맞춤형 서식장을 만들고 가을에 1~7g의 건강한 해삼 종자를 뿌린다. 또한 해삼 서식장 조성 해역을 중심으로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채취활동을 제한해 해삼 자원 조성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통계청, 2016년 어업생산동향 조사결과 발표

작년 어업생산량 325만톤, 전년비 2.6% 감소



257억원으로 전년보다 2.3%(1천 638억원) 증가했다. 천해양식어업 생산금액은 해조류와 패류의 생산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생산금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월 22일 발표한 ‘2016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25만7천t으로 전년보다 2.6%(8만6천t) 감소했다. 천해양식어업은 양식 작황 호조로 김류, 미역류, 굴류, 우렁쉥이 등의 생산량이 늘어 10.7% 증가했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뱀장어, 메기의 생산단가 하락, 소비 증가 등으로 7.1% 증가했다. 연·근해어업은 멸치, 붉은대게, 살오징어 등의 자원량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 부진으로 생산량이 13.4% 줄었으며 원양어업은 오징어류 자원량 감소에 따른 조업 부진으로 21.5% 급감했다. 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7조4천

량 증가로 9.6% 늘었고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메기, 향어 등의 생산단가 하락, 소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금액이 2.5% 늘어났다. 연·근해어업은 생산량 감소에도 판매가격이 올라 생산금액이 0.1% 소폭 증가했다. 원양어업은 생산량이 줄면서 생산금액도 5.0% 줄어 들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의 어업생산량이 144만4,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3만9,000톤), 부산(32만4,000톤) 등이 뒤를 이었다. 연근해어업 중 고등어류 생산량이 17.0%로 가장 많았고 멸치(15.4%), 살오징어(13.3%) 등 순이었다. 천해양식어업 중 미역류가 26.8%로 가장 많았으며 원양어업 중에서는 다랑어류(72.9%)가 가장 비중이 컸다. 내수면어업 중에서는 뱀장어(28.0%) 생산이 가장 많았다.